



##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 '28일'

매년 1월은 사업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세무일정'이 있는 달이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7~12월까지, 간이과세자(개인)는 1~12월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달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인 25일이 설날(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평일인 28일(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와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기다리고 있다.

### 지방소비세율 15→21%...지방곳간 더 뜸살하게

현재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올라간다. 8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려 지방정부의 곳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오른다.

재정배분을 살펴보면 5%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명목에, 6%분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에 쓰인다. 나머지 10%분은 국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곳에 사용된다.

부가세의 지방 몫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2020~2024년) 간 국세(부가가치세)가 약 25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지난 2011년 만들어졌다.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이 보완된다. 이에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를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본다는 것이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 납세자 괴롭힌 '늑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어진다

세무조사 종료 후 시간을 끌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행정감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조사결과와 일부만 확정이 됐다면 통지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현행 법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해야 하지만 국외자료 수집 등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조사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조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 초래된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이유로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재부 또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질의절차 진행 중일 경우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확정 과세액에 대해서는 통지하도록 했다.

주후 협의가 완료되면 완료일 이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해석 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과세여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불복이 줄어들고 과세가 명확한 부분은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